
제19대 대선 한농연의 7대 핵심 농정공약 요구사항

2017. 4. 3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19대 대선 한농연의 7대 핵심 농정공약 요구사항

- 1** 쌀 생산조정제 도입 및 우선지급금 환수 중단
- 2**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인정
-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도입
- 4**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 5** 농업예산 확충,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
- 6** “식품안전청” 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
- 7** 사회보험 방식의 ‘가칭농업노동자해보상보험’ 제도 도입

1) 쌀 생산조정제 도입 및 우선지급금 환수 중단

대선평약 요구사항

- 중장기적(20~30년)으로 벼(쌀) 재배 위주로 고착화된 농업의 생산구조를 다양화하여 식량(곡물, 사료) 자급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실시해야 함(쌀 생산조정제 관련 법령의 별도 제정 포함)
 - 총체버, 옥수수 등의 사료 작물(한·육우, 낙농 분야 조사료용)과 녹비용 작물부터 신중히 시작하여, 국내산 수요(가정용, 식품가공용 등)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논콩·밀 등 식용 작물의 재배 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함
 - 단, 북한 급변사태 및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국내 논의 총 면적 및 재배 여력을 최소한 현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게끔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해야 함
- 2016년산 공공비축미(시장격리미)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를 중단하고, 쌀 농가들이 납득·수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함
 - 197억 2천만원의 우선지급금 환수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미 수매에 응한 쌀 농가들이 납득·수용할 수 있는 특단의 소득보전 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함
 - 2016년도 쌀 변동직불금 미지급분과 관련해서도, 차기 연도분 감축대상 보조금액(AMS)을 활용하여 76억 9,200만원의 변동직불금 미지급분 또한 전액 농가에 지급(사후 보전)해야 함

제안 배경

- 농업계의 강력한 요구로 국회 농식품위가 쌀 생산조정제 예산 904억원(3만ha)을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에서, 농식품부는 별도 예산 투입 없이 벼 재배 면적 축소를 추진중에 있음
 - 지자체(광역, 기초)의 기존 벼(쌀) 생산장려성 예산을 벼 재배 면적 축소용으로 전용하고, 자연감소분(2만ha)에 농식품부 목표 면적(1만ha 내외)을 더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나 향후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임
 - ▲기후 온난화와 벼 재배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총 재배 면적이 감소하더라도

단위당 수확량(단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축소되는 재배 면적도 중산간지역 계단식 논 등 한계지가 대부분일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목표대로 벼(쌀)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임

- 논에서 사료용·녹비용 작물 및 잡곡 등의 재배가 다양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작물의 소득 수준을 최소한 벼(쌀) 재배시 예상되는 소득 수준 정도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함. 아울러 북한 내 급변 사태 및 향후 예상되는 남북통일 등의 변수를 감안하여, 당장 식용벼를 재배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농업생산기반은 유지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 정부의 쌀 수급·가격안정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로 초래된 쌀 대란의 책임을 농업인에게 전가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됨
 - 2016년산 쌀값 폭락의 원인으로, 정부(40kg 벼 포대 당 45,000원)와 농협(RPC 조공법인 포함)의 낮은 우선지급금 책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작년도 정부가 수매한 쌀 68.9천톤(공공비축미 36만톤, 시장격리곡 29.9만톤, AFTERR 3만톤)은 같은 해 신곡 생산량 419.7만톤의 16.4%에 달했지만, 정부와 농협의 소극적 대처로 인해 쌀 농가 및 민간 도정업자의 불안 심리를 잡지 못해 사상 유례없는 쌀값 폭락이 초래된 것임
 - 쌀 농가는 우선지급금을 받아서 부채 원리금 상환 및 생활비 등으로 이미 지출한 상태이며, 본격적인 파종기를 앞두고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이를 무시한 채 정부가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를 강행할 경우, ▲쌀 농가와 환수 실무를 맡은 지역농협·지자체와의 불필요한 마찰·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게 될 것임
 - 통계청 조사 결과 2016년 10월~2017년 1월 평균 쌀값이 129,711원이므로 80kg 쌀 1가마 기준 변동직불금은 33,672원이 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감축대상 보조금액(AMS) 한도 1조 4,900억원을 적용할 경우 33,499원밖에 지급할 수 없으므로, 80kg 쌀 1가마 기준 173억원이 미지급되어 쌀 농가 전체로는 76억 9,200만원을 못 받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임
 - 그러나 농식품부가 차기 연도 감축대상 보조금액(AMS) 한도를 활용해서라도 변동직불금 미지급분을 사후에라도 쌀 농가에 전액 보전할 수 있음에도 사태 해결에 미온적임

2) 국산 농축수산물·농식품을 적용 예외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대선공약 요구사항

-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개정하여, 국산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농식품에 대해서는 적용을 예외로 해야 함
 - 핵심 이해 당사자인 농어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과일류·축산물·수산물·화훼류 등에 대해서는 일반 공산품 등과 달리 예외 품목으로 인정해야 함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한우·인삼·버섯류·과실류 등 고가 농축수산물(농식품)의 피해가 실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보완(지원) 대책 또한 조속히 마련·시행되어야 함

제안 배경

- 작년 9월 28일부터 시행중인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인해, 설·추석 명절 선물용 소비 비중이 높은 농축수산물의 피해가 실제 나타나고 있음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화환·조화 포함)는 10만원으로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음
 - 2017년 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백화점 3사(신세계·롯데·현대) 및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의 설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실적을 조사한 결과, 17년 설 식품(농축수산물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 설 대비 14.4% 감소하였으며, 특히 국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은 2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청탁금지법 시행후 농축산물 도매·산지거래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한우는 도축량이 감소(17년 1월 기준 전년 대비 7.1%)하면서도 수요 부진으로 가격도 하락(9.6%)한데다, 도매거래액은 16.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화훼의 경우 난 등 분화류 거래액은 18.5% 감소, 과일의 경우 사과·배 거래액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청탁금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 2017. 2. 22)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도입·실시

대선공약 요구사항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함
 - 정부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세부 내용(시행지침)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하위 법령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해야 함
 - 이를 통해 ▲정부·지자체·농협 등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계획 수립·시행 책무를 부과하고 ▲예비·신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교육·훈련·멘토링 등의 육성·정착 지원 조항 ▲영농승계 혹은 신규창업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 방안(세제 혜택,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시행 등)을 종합적으로 명시해야 함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의 원활한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하여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를 도입·지원해야 함
 - 지원 대상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지정된 지 5년 미만인 자
 - 지원 방식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지정후 5년차 종료 시점까지 1인당 매년 1,500만원을 매월 급여 형태의 보조금으로 지원(매월 125만원 지급)
 - 예산 소요 : 매년 최대 1,350억원(산출 근거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인원 1,800명 × 1,500만원 × 5년)

제안 배경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률·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1981년 이후 2016년까지 총 14만명이 넘는 후계농업경영인(구 농어민후계자)이 지정되었으나, 이들의 육성·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은 1회성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불과하여 체계적·종합적 지원·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과 관련 법 조항은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1980년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년대)에 이어 ▲현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영돼 있음

- 그러나, 이들 법령에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에 관한 선언적 문구로만 그치고 있으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 및 주요 정책 과제가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나아가 헌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후계농업경영인”의 법적 정의가 명시돼 있지 않은데다, 농업·농촌정책 상 “후계농업경영인”의 불명확한 지위 및 위상에 관련된 문제점 등도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과제임

○ 농업인(후계농업경영인 포함)이 자녀에게 경영승계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함

- 한농연 회원 대상 인터뷰 및 다수의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와 함께 영농을 하면서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부모로부터 영농사업의 일부를 할애받아 독립적 영농을 하거나, 부모의 영농을 돕는 보조 역할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음
- 농업경영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품목(축종)별로 전문화·전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향후에는 자녀 세대의 농업경영 승계를 통한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이 실질적인 농업 진입 경로로 자리잡게 될 것임
- 이들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이 부모 세대의 은퇴 혹은 사망 이후에 부모가 성장시켜 온 영농 기반을 이어받아(농업경영 승계), 1차 농업생산은 물론 가공, 유통 등 6차산업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농업경영 승계를 고려중인 농가에게는 경영 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농지를 비롯하여 농업생산 기반에 대한 증여 및 상속세 부담을 완화(과세특례)하는 등의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 정착시까지 최대 애로 사항은 생활 자금 및 영농(운전) 자금의 부족에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농경연 “농업전망 2017 참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소득 보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 과수·축산·특작의 경우 최초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뒤 최초의 수확물을 거둬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을 때까지 4~5년(인삼의 경우 한 사이클 당 6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생계를 꾸리고 영농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거나(현재 후계농에 대해서는 농외부문 취업 및 창업을 금지) 정부·지자체의 소득

보조가 필요한 실정임

- 농식품부는 2016년부터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된 자에게 창업안정자금을 월 80만원 최대 2년간 지원(총 300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매년 1,800여명 이상 선발되는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등 '의무영농'을 수행하거나 완료한 자, 동일 세대 내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영농하는 자 등이 제외되었음)

○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 지원 관련 해외 사례

- 일본의 청년취농자금 지원금 제도 : 45세 이하 청년 취농자에게 준비기간(2년)과 독립기간(5년)의 총 7년 동안 급여 형태의 보조금(연간 150만엔, 우리나라 돈 1,600만원을 지원)을 지급하고 있음
- 프랑스의 영농정착 지원금 제도 : 18세~40세 미만의 청년영농정착지원 대상자에게 최소 4천유로(500만원, 평야지역, 겸업)~최대 35,900유로(4,487만원, 산악지역, 전업)을 지원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의 청년농업인 직불금 : 2015년부터 40세 미만으로 농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시작한 지 5년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청년농업인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회원국의 의무(강제)조항으로 결정하여 시행중이며, 국가별로 배정된 직불금 총액의 2%까지 지불할 수 있음

4)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하여 헌법 내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함
 - 현행 제9차 개정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제121조(경자유전의 원칙)과 제123조(농어업의 보호·육성)에 반영된 농업·농촌 관련 조항을 대폭 강화하여,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부·농업인·국민간의 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를 명확히 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함
- 제10차 헌법 개정시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조항은 아래와 같음
 - 농업·농촌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농업예산 및 직불금 확대 편성 등)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부·농업인·국민간 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 명시
 - 5~10년 단위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기본계획) 수립·집행의 근거 마련(미국 농업법 체계를 참조)
 -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농지의 소유·이용·보전 원칙 강화, 농촌 공간의 활용 원칙 천명
 - 지속가능한 가족농 체제의 유지·발전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정책 수립 및 지원 근거 마련
 - 통상협상과 관련한 농업인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 보장 및 의견 반영 의무화

제안 배경

-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에 비해 현행 헌법 내 관련 조항은 매우 부실함
 - 1987년 공포·시행중인 현행 제9차 개정 헌법에는 “제9장 경제”의 제119조~제127조가 농업·농촌 부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며, 이 중에서 특히 제121조(경자유전의 원칙)과 제123조(농어업의 보호·육성)은 직접 연관되는 것임.

아울러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 또한 농업·농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조항으로 판단됨

- 그런데 제123조(농어업의 보호·육성) 내 조항들은 ▲농업·농촌 관련 조항과 중소기업 관련 조항이 혼재돼 있어, 이를 분리하여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으며, ▲농업·농촌의 보호·육성을 위한 국가(정부) 및 국민의 책무에 대한 내용이 선진국의 사례(아래의 스위스 연방헌법 제104조 참조)와 비교했을 때 빈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 올해 1월 5일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헌개특위)가 출범하여 1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개헌안 검토에 돌입한 상태임
- 그런데 헌개특위가 구성·운영중인 자문위원단에는 한농연 등 농업계가 추천한 인사가 전혀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헌법 제121조 제1항의 경자유전의 원칙마저 “농촌인구 감소 등 시대상황적 변화를 반영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헌법 개정시 반드시 감안·반영되어야 할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참고) 스위스 연방헌법 제104조(농업)

- ① 연방은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 및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며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기여를 하도록 보장한다.
 - a. 국민에 대한 공급안보
 - b. 천연자원의 보존 및 향토경관의 유지
 - c. 지역 분산적인 인구분포
- ② 연방은 농업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호지원조치에 대한 보완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경제의 원칙에서 벗어나 농민의 토지경작을 장려한다.
- ③ 연방은 농업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연방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
 - a. 연방은 농민이 생태학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하는 조건으로 농업 활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소득을 보전한다.
 - b. 연방은 경제적으로 유익한 장려책을 통하여 자연친화적인 환경 및 가

축의 생산을 장려한다.

- c. 연방은 식료품의 원산지, 품질, 제조방법 및 가공공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 d. 연방은 비료, 화학물질 및 기타 첨가물의 남용으로 인한 환경의 파괴를 예방한다.
 - e. 연방은 농업의 연구, 지도 및 교육을 장려하고 투자를 지원할 수 있다.
 - f. 연방은 농촌지역의 토지소유를 안정화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 ④ 연방은 이를 위하여 특별 배정된 농업예산 및 연방의 일반 재원을 투자한다.

5) 농업예산 확충,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식품분야·농식품부 소관 예산의 증가율을 국가 전체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비중을 5%까지 확대해야 함
 -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망 정비·확충의 핵심 과제를 제대로 실천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영위하기 위해 농식품분야·농식품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함
- 농업예산 중 직불제 비중을 대폭 확대·추진함으로써 농업의 다원적 기능 증진
 -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2016년 기준 14% 수준에서 차기 대통령 임기 만료시까지 약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EU와 스위스 수준인 80%까지 인상시켜야 함
- 쌀소득보전직불제 변동직불금을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벼 재배 여부와 상관없이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게 되면, WTO 농업협정문 상 생산제한 하의 직접지불제도(Blue-Box)로 분류되어 변동직불금 지급 상한(현행 1조 4,900억원 AMS 한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됨은 물론, 휴경 혹은 타작물 재배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생김으로써, 벼(쌀) 과잉 생산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밭농업직불제의 경우, 고정직불금을 ha 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변동직불금(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지급하여 과잉 생산·출하를 억제)도 지급해야 함
 -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자란(한-중 FTA 후속 대책 차원에서 2020년이 되어서야 ha 당 60만원 지급토록 결정) 밭농업직불제 고정직불금을 ha 당 100만원으로 균등하게 지급해야 함
 - 밭농업직불제 변동직불금의 경우, 핵심 밭작물의 생산비와 연계시켜 5년 단위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 목표가격간의 차액을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하되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과 마찬가지로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밭작물의 과잉 생산·출하를 억제하는 효과를 도모해야 함

제안 배경

- 전체 국가예산 중 농업예산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대비 농업예산 증가율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직불금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 확보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국가 전체예산 및 농식품분야·농식품부 예산액 변화 추이> 단위 : 억원, %

연도	국가전체		농림수산물 식품분야			농림축산 식품부		
	전년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전체대비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전체대비 비중	
'06	2,241,000	6.9	147,703	7.2	6.6	135,539	2.1	6.0
'09	2,845,000	10.6	168,745	6.0	5.9	146,363	4	5.1
'12	3,254,000	5.3	181,322	2.8	5.6	136,779	3.7	4.2
'15	3,754,000	5.5	193,065	3.1	5.1	140,431	3	3.7
'16	3,864,000	2.9	193,946	0.5	5.0	143,681	2.3	3.7
'17	4,005,000	3.7	196,221	1.2	4.9	144,887	0.8	3.6

자료 :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각연도자료(www.mafra.go.kr)취합·정리

- 위의 표를 보면,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06년 6.6%에서 2017년 4.9%로 감소하였음. 또한 '17년 전년 대비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은 3.7%인 반면 농업예산 증가율은 0.8% 수준임.
 - 특히, 박근혜 정부의 '13년-'16년 농업예산 증가율은 평균 1.25%에 그쳐 참여정부 평균 3.46%, 이명박 정부 2.46%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망 정비·확충의 핵심 과제를 제대로 실천하고, 농업의 다원적기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분야·농식품부 예산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 정부가 실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에 있어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여하는 바는 크지 못하며,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극대화 하는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음.
- 농업직불제가 다양하게 시행되고 예산도 늘어나고 있으나 2014년 기준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 액수는 농업소득의 18.2%, 농가소득의 5.4%에 불과하여 실제 농가소득 기여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현행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충분한 보상에 한계가 있

으며, 특정 품목 집중, 면적당 지원에 따른 농가 양극화 문제, 복잡한 제도와 시행체계, 통합성 제고 불가, 불명확한 상호준수 이행조건 및 직불제 공감대 형성 한계 등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공익형 직불제와 소득보전 직불제의 조화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상호준수의무를 전제하면서 현행 직불제를 전면 확대·재편해야 함.
 - 미국, EU, 일본,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WTO/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발생 가능한 농가소득의 하락, 농업경영의 불안정 문제 외에도 자국의 농정문제 해결 및 농정목표 달성(식량 공급, 국토 균형발전, 농업환경 및 자연보호, 문화경관보전 등)을 위해 농업직불제를 개편·강화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공익형 농업직불제를 확충하고 쌀 등 주요 품목 생산농가의 소득 및 경영리스크를 완화하여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임.
 -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하는 공익형직불제에 있어서는 농가의 의무이행 준수를 전제하여 다원적 기능 제공자로서 농업생산자가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함.

6) “식품안전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

대선평약 요구사항

-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조직으로 편성·운영중인 식품 위생·안전관리 조직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인 “식품안전청”으로 독립·편성해야 함
 - 식품산업의 진흥·발전 업무는 기존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에서 담당토록 하되, 식품안전관리 및 식품안전평가 업무는 “식품안전청”에서 담당토록 함으로써 식품안전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해야 함
 - 이를 통해 국제기구(FAO, WHO)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농장부터 식탁까지” 일관된 관리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식품안전은 사육·재배시 농약, 항생물질 및 광우병 등 질병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달성될 수 있는 것임)
- 신설되는 “식품안전청”이 담당해야 할 업무
 - 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중인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이관
 - 기준설정, 허가, 심사, 지도점검, 시험검사, 위해분석, 연구개발, 교육, 홍보 등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토록 함
 - 농업인·소비자교육·홍보·교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 업무 등

제안 배경

- 2013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중이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전문적·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산업 진흥·육성 업무를 침해할 소지마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일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2월 직제 개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시도하면서 산하 국·과의 명칭에 “식생활소비”, “식생활영양”, “수입식품정책” 등의 표현을 반영하려 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한농연 및 축산관련단체 등의 강력한 이의 제기로 무산된 바 있음
 - 식품위생 및 안전 관리 업무에 있어 전문성·체계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식품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의약품과 동일(유사)한 단속 기준을 일

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의 진흥·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임

- 식품안전은 원재료가 나오는 최초 사육·재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농약, 항생물질 및 각종 가축질병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달성할 수 있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원재료가 나오는 사육·재배단계를 관리할 수 없으므로 체계적·전문적인 식품위생·안전의 관리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농업선진국들도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기존 식품안전 담당 부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자 전면 쇄신을 단행하였으며, 농업식품부처 중심으로 개편된 경우가 많음(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등)

7) 사회보험 방식의 “(가칭)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 제도 도입

대선평약 요구사항

- 민간 보험회사(NH농협생명)의 보험상품에 임의가입 방식으로 이뤄지는 현행 “농업인안전보험”을 대체하여, 중앙정부가 의무가입 방식의 사회보험인(산재보험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칭)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을 도입·실시해야 함
 -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에 모든 농업인과 농업노동자들이 의무가입토록 함
 - 위험성이 높은 농작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험 제도를 구축·운영해야 함
 - 사망 또는 고도장해시 지급하는 보험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함

제안 배경

- 기존의 “농업인안전공제”를 대체하여 NH농협생명보험에서 “농업인안전보험”을 판매·시행중이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이 아닌 민간 보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농업경영주이자 자영업자인 농업인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근로자의 성격이 인정되어야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농·축협 직원 혹은 농업노동자 중 극히 일부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
 - 특히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개인 사업자 및 일부 농업법인은 가입을 기피하는 상황임.